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4년도 제45호

[혼돈의 한국 체육]

“제왕적 리더십 탈피해야” 개혁 실마리는 ‘이원화’

김종원 스포츠월드 기자

체육계 시민단체, 스포츠 공정위의 불공정 행태와 회장 비위 강력 비판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누구를 위한 기구인가? 체육계, 이기흥 회장 사퇴 촉구

이수진 이로운넷 기자

정부 ‘수사의뢰+직무정지’ 총공세 나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3선 도전’ 전격 승인

‘3선 저지’ 정부 압박 최고조...벼랑 끝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선택은?

이동섭 일요신문 기자

‘징계하면 뭐하나, 뭉개면 그만인데...’

문체부 발표 이후 내분-불만 커진 배드민턴계 왜?...600여명, 회장 해임 요구했지만...,

‘무용지물’로 끝나

최만식 스포츠조선 기자

3년간 임원지도자선수 등 16건 발생... 자격정지제명 등 징계 이뤄져

성폭력 직권남용 공금유용까지... 비리 얼룩진 충남 체육계

김동근 대전일보 기자

공평성 내세워 ‘추첨제’ 예고하자 기존 회원 “소통 불충분” 거센 반발

구청 체육센터 이용 방식 바꾸는 데에도 공평 논란?

김준현 부산일보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혼돈의 한국 체육] “제왕적 리더십 탈피해야” 개혁 실마리는 ‘이원화’

“안팎으로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말 이례적인 일이다.”

대한민국 체육계 전반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불과 두 달 전 열린 2024 파리 올림픽을 역대 최다 타이 기록인 금메달 13개로 마쳤지만, 그 열기는 온데간데없다. 선수들의 피땀으로 이뤄낸 성과가 오롯이 조명받지 못한 지도 오래다. 체육계 리더를 자처하고 있는 ‘어른’들이 각종 논란으로 이목을 독차지했기 때문이다.

전 국민적인 공분에 휩싸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대표적이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도 마찬가지다. 각각 출마를 공식 선언하진 않았지만, 두 단체장 모두 내년 1월 선거를 통해 또 한 번 대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이들 모두 체육 단체장으로 분명한 성과를 냈다. 이러한 공로와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는 점이다. 이 회장은 부정 채용 지시,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물품 후원 요구 등 비위 혐의로 수사 의뢰됐다. 이와 관련된 경찰 수사도 시작 단계다. 정 회장 역시 국가대표 감독 선임 개입, 조직 사유화, 운영비 사용 등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는 곧 세금으로 운영되는 체육 단체들이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체육시민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4일 공동 규탄 성명과 함께 “이 회장은 독재적 조직 사유화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을 맡고 있는 정용철 서강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체육계의 고질적인 병폐 가운데 하나로 불도저식 운영을 손꼽았다. 이어 그는 “오랜 비판에도 반성은커녕 자성의 목소리조차 없다”며 “체육회 노조가 퇴진 시위를 할 정도 아닌가. 모두가 입을 모아 바꾸자고 말한다.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고 힘줘 말했다.

상처투성이가 된 체육계, 그럼에도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스포츠 칼럼니스트인 정윤수 성공회대 문화대학원 교수 또한 고개를 끄덕인 대목이다. 정윤수 교수는 “현재 체육회와 이 회장이 보여주고 있는 리더십은 제왕적인 통치 시스템에 기반해 퇴행적인 행태를 거듭했다. 지난해 해병대 캠프 논란만 봐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체육회는 지난해 12월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원 팀 코리아’라는 명목으로 올림픽 출전 예정인 국가대표 선수단을 참석시켜 물의를 빚었다. 올림픽이 끝난 뒤 이 회장은 방송에 출연해 “올림픽의 성과는 해병대 캠프 덕분”이라고 자화자찬하기도 했다.

정윤수 교수는 “성과만 내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는 사고방식이 문제다. 우리가 스포츠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체육회 문제에 가려진 현안이 너무 많다. 학생선수 학습권만 해도 그렇다.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했다.

구체적인 개혁안도 제시됐다. 이 가운데 하나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분리하는 방안이다. 2019년 출범된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시작해 많은 전문가의 호응을 얻었다.

정용철 교수는 “한 단체(대한체육회)에 너무 많은 힘이 실려 있다. 무소불위 권력에 가깝다. 국내·외 체육 업무를 나눠서 이원화한다면, 변화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로운요구]스포츠 공정위원회는 누구를 위한 기구인가? 체육계, 이기흥 회장 사퇴 촉구

공동성명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반공정, 불공정위원회인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셀프 심의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2024년 11월 13일

체육시민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 문화연대



체육계 시민단체들이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다.

체육시민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 문화연대는 지난 13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스포츠 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를 '반공정, 불공정위원회'로 규정하며 해체를 촉구했다.

공정위는 최근 이기흥 회장의 연임 심의 과정에서 '셀프 연임 심의'라는 비판을 받았다.

성명서에 따르면, 공정위 위원장은 이 회장의 특별보좌역 출신으로 임명됐으며, 나머지 위원들 역시 모두 이 회장이 직접 임명한 인물들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이 회장의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체육계 시민단체들은 최근 드러난 이 회장의 자녀 친구 부정채용 의혹, 배임, 갑질 논란 등 각종 문제에도 공정위가 어떠한 문제의식도 없이 이 회장의 입장을 두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정위가 공정성을 상실한 채 스포츠 행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이런 공정위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이기흥 회장이 선수와 지도자의 인권 보호,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 시민들의 스포츠 접근성 강화 등 대한체육회의 핵심 책무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회장이 "해병대 캠프에 국가대표 선수들을 보내는 비효율적 행정과 독단적 운영으로 대한체육회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대한민국 스포츠가 추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 회장의 독단적 행정이 조직 사유화 문제를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 세금 4천억 원을 들여 운영하는 체육회가 공정성과 책임감을 상실한 채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체육계 시민단체들은 이번 성명서를 통해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요구사항은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심의 의결을 철회하고 즉각 해체할 것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모든 비위 행위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할 것 △체육계에 누를 끼친 이기흥 회장은 즉각 사퇴할 것

시민단체들은 "스포츠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며, "대한체육회가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비정상적인 체계와 행정적 병폐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체육회의 향후 대응과 이기흥 회장의 입장 발표가 주목되는 가운데, 체육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선 저지' 정부 압박 최고조...벼랑 끝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선택은?

정부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기흥 회장 직무를 정지했다. 국무조정실은 이 회장을 둘러싼 부정 채용, 후원 물품 사적 사용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이 회장의 3선 연임 불꽃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 회장 3선 도전을 전격 승인했다. 이 회장 3선 도전을 둘러싼 '파워게임'이 절정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선 연임 도전 여부가 정치권과 체육계의 뜨거운 감자다. 이 회장은 3선 연임 도전 가능성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회장 출마 여부는 차기 대한체육회장 선거 구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체육계 내부에서도 이 회장이 3선 연임에 도전할 것인지 여부와 그 당위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양상이다.

사실상 '이기흥 회장 3선 연임 저지'에 팔을 걷어붙인 정부는 압박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다. 11월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이 회장을 비롯한 대한체육회 임직원 8명에 대한 직원 부정채용, 후원 물품 사적 사용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전격 의뢰했다.

점검단은 "갑작스러운 파리 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장소 변경에 따른 예산 낭비, 출장 결재 등 복무처리 없이 근무지 외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허위 증빙자료 작성을 통한 업무추진비 선결제 등 체육회 운영에도 다수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 회장이 대면 조사를 회피하고, 체육회 업무용 PC 하드디스크 무단 제거, 자료 제출 거부 등 체육회가 점검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대한체육회는 "국무조정실 비위 점검결과 발표에 대해 동의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대한체육회는 "파리 올림픽 이후 3개월에 걸쳐 문체부, 국회 문체위 청문회 및 국정감사, 국무조정실 현장조사, 감사원 감사를 동시다발적으로 받아왔다"며 "대한체육회 구성원들은 동일 내용에 대해 복수 기관 조사를 반복적으로 받다보니 피로에 지쳐있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이 이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에 발맞춰 문체부도 움직였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2024년 초부터 체육계 각종 현안 관련해 이 회장과 갈등을 빚어온 바 있다. 11월 11일 저녁 문체부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 점검결과를 근거로 이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체육계 한 관계자는 "문체부가 상당히 기민하게 이기흥 회장 직무정지 조치에 나섰다"며 "11월 12일 이 회장 3선 연임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앞두고 선전포고를 날린 격"이라고 평가했다.

11월 12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열렸다.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은 대한체육회장이 임명하는데, 위원들이 임명권자인 대한체육회장 3선 연임 승인 여부를 심의 및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체육계 안팎에선 '이해충돌 논란'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체육계 내부 관계자는 "12일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기흥 회장 3선 연임 길을 열어주는 행정절차일 뿐"이라며 "이미 정량평가 방식으로 이 회장 3선 명분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공정위가 개최되기 때문에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체육계 일각에선 스포츠공정위를 신군부 시절 군내 사조직 '하나회'에 비유하는 비판 여론도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공정위가 열리기 전 올림픽회관 앞에선 차기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1인 피켓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강 교수는 스포츠공정위를 향해 "스포츠 불공정위원회가 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강 교수는 "스포츠공정위가 체육인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사랑을 받는 대한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용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체육회 노동조합도 시위를 벌였다. 대한체육회 노조는 '국회도 무시하고 꿈수로 연임에 도전하는 이기흥 회장은 물러나라'는 메시지가 담긴 현수막을 들고 규탄시위에 나섰다. 스포츠공정위를 향해 상식과 가치에 입각해 안건을 심의하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기흥 회장 3선 연임과 관련한 반발 목소리가 커졌지만, 스포츠공정위는 이 회장 3선 길을 전격적으로 열어줬다. 스포츠공정위는 이 회장 연임 신청을 승인했다. '셀프 심의'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체육시민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는 14일 성명을 통해 “이기흥 회장은 자신의 특별보좌역 출신을 스포츠공정위원장으로 앉히고 나머지 위원들도 자신이 임명했다”며 “스포츠공정위는 예상대로 이기흥 회장 거수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고, ‘셀프 연임 심의’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체육시민연대는 “이기흥 회장 조직 사유화 병폐는 일일이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차고 넘친다”며 스포츠공정위 해체와 이기흥 회장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해외 출장길에 올라 있던 이기흥 회장은 12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냈다. 다음날인 1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이 회장은 3선 도전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은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구성원들과 논의해 결정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국무조정실이 이 회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해선 “1%도 동의 못한다”고 했다.

이 회장 3선 연임 도전 현실화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 회장이 향후 정부 압박 수위나 가처분신청 결과 등을 지켜보며 3선 연임 도전과 관련한 최종 결정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간을 충분히 두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결정을 내리겠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문체부는 이 회장이 3선 연임에 도전해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이 회장 3선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표명해 왔다. 대한체육회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을 두고도 강력한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체육회 중심 체육행정 시스템에도 개혁의 칼날을 들이댈 가능성이 제기된다. 모든 압박의 전제는 이 회장 3선 연임 현실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 3선 연임 도전 여부는 차기 대한체육회장 선거 구도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체육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이 회장이 불출마할 경우엔 ‘군웅할거’에 가까운 다자구도가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후보의 경쟁력에 따라 선거 승패가 좌우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체육계 내부선 ‘이기흥 불출마 시나리오’를 염두하고 몇몇 광역지자체 체육회장들이 출사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포스트 이기흥’을 노리는 주자들과 ‘반 이기흥’을 표방하는 주자들이 대한체육회장 자리를 놓고 각개전투를 벌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이 회장이 출마 의지를 굳힐 경우엔 ‘이기흥 대 반 이기흥’ 구도로 선거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반 이기흥 진영’서 후보 단일화에 난항을 겪어 다자구도로 선거가 진행된다면, 이 회장이 다시 한 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지자체 체육회 관계자는 “이기흥 회장을 향한 정부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이 회장이 출마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지지세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당선 되더라도 정부와 정면충돌이 예고된 상황인 까닭”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이기흥 방지법’도 공론화되고 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대한체육회 자체 기구인 스포츠공정위가 가진 체육회 임원 연임 심의 권한을 제3의 외부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에 맡기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기흥 방지법’을 발의했다. 대한체육회 회장과 경기단체 임원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정 의원은 “대한체육회가 비위 혐의로 직무정지된 이기흥 회장 3선 도전을 승인하는 등 자정 기능을 상실했다”며 “대한체육회 불공정 카르텔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문체부 발표 이후 내분-불만 커진 배드민턴계 왜?... 600여명, 회장 해임 요구했지만... '무용지물'로 끝나

'징계하면 뭐하나, 뭉개면 그만인데...'

최근 배드민턴계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배드민턴협회를 대상으로 내린 엄중 조치를 두고 회의론이 확산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달 31일 '배드민턴협회 사무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 점검' 최종 결과 발표를 갖고 사실로 밝혀진 협회의 각종 비리·부실행정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김택규 회장에 대해 해임을, A사무처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문체부의 이런 엄정 조치가 사실상 무용지물인 데다, 배드민턴계 내부 갈등만 가중시키는 상황으로 이어지자 문체부를 되레 원망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13일 스포츠조선 취재를 종합하면 협회 일부 부회장, 이사와 전국의 일선 지도자 등 600여명은 지난 11일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김 회장의 직무정지 안건을 심의해 달라'는 요구서를 협회에 제출했다. 각급 학교·실업팀의 엘리트 지도자뿐 아니라 생활체육 지도자까지 연대 서명에 참가했고, 일부 선수도 동참하는 등 '안세영 작심발언' 사태 이후 가장 광범위한 배드민턴계 내부 민원이다.

이번 징계 요구는 문체부가 김 회장의 해임을 요구했는데도, 협회가 묵살하듯 여전히 안하무인 태도로 일관하자 '이러다가 더 큰 철퇴를 맞겠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자정노력의 일환이었다. 문체부는 조사 최종 발표에서 "협회가 자정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면서 향후 국고보조금 환수, 관리단체 지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스포츠종목단체 입장에서 '관리단체'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하지만 협회가 회장 해임안 심의를 위한 공정위를 개최할지, 개최하더라도 문체부 요구대로 해임이 가결될 지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와 공정위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공정위는 협회 산하 분과위원회로 자문기구 중 하나로 분류돼 있다. 특히 김 회장은 지난해 10월 당시 공정위(9명)가 최소 구성 요건(7명 이상)을 갖춘 상태였는데도 5명의 위원을 추가 임명, 현행 14명 체제로 만들었다. '공정위가 회장 친정체제로 구축됐다'는 주변 우려도 이때부터 나왔다.

공정성·중립성에서 의심받은 공정위가 어떻게 회장을 상대로 징계 심의를 하겠느냐는 우려가 그래서 나온다. 실제 대한체육회가 지난 12일 공정위를 열고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 길을 열어주는 '셀프 연임 심사'를 통과한 사례가 나오자 배드민턴계의 불안감은 더 커졌다.

공정위의 '기울어진 운동장' 분위기는 요구서 접수 단계에서 이미 노출됐다. 서명자를 대표한 김모 부회장은 당초 공정위원장에게 직접 요구서를 접수하려 했다. 서명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공정위원장은 접수를 거부하고 "공정위가 협회 조직이니 협회에 제출하라"고 답변했다. "협회 회장과 사무처장이 징계 대상인데, 그들에게 개인정보가 열람되면 어떡하느냐"며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고 한다. 결국 김 부회장은 협회 담당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신신당부한 뒤 요구서를 접수했다.

공정위의 불공정 우려만 문제가 아니다. 김 회장이 '버티기'에 들어가면 별 도리가 없다. 현 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 불과 2개월 남짓 남았다. 김 회장은 문체부의 최종 발표 뒤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 "누가 나를 해임하느냐"를 운운하면서 강력 반발했다. 여기에 문체부의 조사 결과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된 이의신청 기간이 발표일로부터 1개월이다.

김 회장이 이의신청, 법적 대응 등의 절차에 들어갈 경우 시시비비를 가리느라 적잖은 시간이 흐를 것이고, 그러다가 회장 임기를 끝까지 마치게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다수 예측이다. 결국 문체부의 해임 요구는 변죽만 울리는 '요식행위'로 그칠 위험이 커지게 된다.

김 회장은 최근 문체부 조사 관련 대책회의를 하면서 이른바 '친위세력' 시도 협회장, 임원들만 만나 논의하는 등 '반대파'와의 전선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 조사로 협회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긁어 부스럼'이 되는 형국이다. 협회의 한 대의원은 "문체부가 애매하게 조치를 하는 바람에 협회 내분만 심화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방치되다가 회장이 임기 다 채우고 떠나면 뒷감당은 누가 책임져야 할지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성폭력 직권남용 공금유용까지... 비리 얼룩진 충남 체육계

충남도체육회에서 고질적인 병폐로 꼽히는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원·지도자·선수 등 지위와 상관없이 (성)폭력·직권남용·공금유용 등을 저질러 출전정지·자격정지·제명 등 징계가 이뤄졌다.

도체육회가 박기영 도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스포츠 인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도내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접수·처리를 기준해 지난 3년 동안 모두 16건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2022년 6건 △2023년 8건 △2024년(10월 1일 현재) 2건이며, 지도자 8명·임원 6명·선수 2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우리나라 체육계에 만연했던 '폭력행위(성, 언어, 신체)'가 가장 많은 75%(12건)를 차지한데 이어, 직권남용(2건), 보조금 유용(1건), 관리소홀(1건)이 뒤따랐다.

징계유형은 △출전정지 1회-1년 △자격정지 3월-4년 △제명으로, 회원단체 가운데 A임원은 지난해 3월 보조금 유용으로 '제명'을, B임원은 지난 9월 폭력·인권침해로 '자격정지 4년'을 조치했다. 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뿐만 아니라 소속기관도 경고·정직·계약해지·해고를 결정했다.

상급단체인 대한체육회의 경우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이 지난 10일 직원 부정채용, 후원요구(금품수수), 후원물품 사적사용 등으로 이기흥 회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같은 사유로 지난 11일자로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임원이 비위행위를 한 사실·혐의가 있으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기영(공주2, 국민의힘) 도의원은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안타깝다. 옛날 방식으로 경기력 향상 등을 위해 물리력을 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며 "우선 지도자들의 마음가짐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도체육회가 확실한 의지로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두에게 골고루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5. 7월 프로그램부터
전 종목 회원 신규 추첨입니다!

매년 6월 전 종목 추첨

기존회원 재등록
 * 남은 자리에 대해 신규회원 등록(추첨)
 * 수영 강좌 등록 현황 : 총족 2,218명
 - 기존회원(2019.7~현재까지) 2,113명(95.3%)
 - 신규회원 105명(4.7%), 대기인원(일자리) 1,587명

남구국민체육센터가 함께 합니다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문의: 051-711-2340)

구청 체육센터 이용 방식 바꾸는 데에도 공평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 일부 구·군 공공 체육시설 회원 모집에 ‘추첨제’ 도입이 검토되면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제비뽑기식 추첨제를 도입하겠다는 거다. 반면 기존 회원 사이에서는 교육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불만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그동안 부산 기초 지자체가 운영하는 구립체육센터 인기 강좌 대부분은 기존 회원이 제한 없이 연달아 이용할 수 있었다. 기존 회원이 아니면 강좌를 듣기 힘들었다. 기존 회원이 빠져야 자리가 남는데 빈자리를 잡으려고 새벽부터 체육센터 앞에 대기하는 줄이 생길 정도였다.

부산 남구청은 내년 1월부터 용호동 남구국민체육센터1관에서 진행하는 수영, 아쿠아로빅 강좌에 대해 추첨제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회원이 우선 등록한 후 남은 자리에 대해 선착순으로 접수하는 기존 방식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남구청 측은 추첨이 되지 않으면 다음 달 다시 도전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남구청 측은 수료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남구청이 도입하는 추첨제는 매달 일정 기간 회원을 모집하고서 실제 수업을 들을 인원을 제비뽑기처럼 똑같은 확률로 뽑는 방식이다. 회원으로 뽑힌 사람은 최대 6개월 동안 자신이 지원한 강좌에 대해 등록 연장이 가능하다. 6개월이 지나면 수업을 수료하게 되고, 다시 추첨에 응해야 한다.

수영구청도 내년 7월부터 수영구국민체육센터 강좌 전 종목 회원 모집을 추첨제로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수영구의 경우 추첨에서 선발된 인원은 1년 동안 강좌 등록 우선권을 보장받는다. 연제구에서는 이미 6개월 단위의 추첨제와 수료제를 통한 회원 모집이 이뤄지고 있다.

일부 구·군의 체육센터 회원 모집 방식 변화는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남구청 관계자는 “인기 강좌는 기존 회원이 다시 수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신규 회원이 듣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특정 시간대의 아쿠아로빅 강좌를 10년 동안 듣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체육센터 일부 강좌의 경우 빈자리가 나면 주민들이 체육센터 앞에서 진을 치고 선착순 접수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체력이 떨어지는 고령 회원은 이용할 엄두를 못 내는 경우도 있다.

지자체들은 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 취지에 따라 추첨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첫 단계부터 강한 반발에 부딪히는 실정이다.

기존 체육센터 회원들이 온라인 민원부터 지역 구청에 단체로 방문하는 등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일방적인 통보와 더불어 추첨제 방식이 오히려 충분히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최근 추첨제를 예고한 남구청은 심한 진통에 시달리고 있다. 남구청 측은 지난 12일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이 소통하는 자리도 가졌으나 서로 견해차만 확인한 채 마땅한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민원인 양 모 씨는 “기존 회원들도 새벽 2~3시부터 기다려서 어렵게 등록했는데, 의견 수렴도 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남구 주민 이 모 씨는 “수영에서 6개월이면 막 발차기를 끝낼 단계인데, 추첨을 받지 못하면 언제 영법을 제대로 배우냐”며 “만약 추첨제로 바뀌게 된다면 다른 체육센터로 옮길 것 같다”고 말했다.

주간 스포츠 소식

유도 영웅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https://www.yna.co.kr/view/AKR20241118075900007?input=1195m>

WKBL 올스타전, 한일 올스타 맞대결 펼친다... 12월 22일 부천체육관 개최

<https://www.starnewskorea.com/stview.php?no=2024111812072934290>

도의회 “경남체육회, 회계 관리 부실...감사 필요”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08669&ref=A>

체육강군 음성군 스포츠 열기로 ‘들썩’

<https://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9604>

올림픽 최초 여자 메달 임애지 이름 딴 복싱체육관 생겼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877541&plink=ORI&cooper=NAVER

대구 중구 ‘복지누리 반다비 체육센터’ 착공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08702&ref=A>

‘마루 위의 컬링’...전국 장애인 생활체육 ‘보치아’ 대회 등[시흥소식]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117_0002962100

경찰, ‘부정채용·횡령 의혹’ 이기흥 체육회장 내사 착수

<https://www.yna.co.kr/view/AKR20241113137400004?input=1195m>

전북도·서울시, 올림픽 경쟁...대한체육회 후속 절차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08301&ref=A>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